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 오늘의 주요기사

조간 (2016.09.07)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홍보팀





,



,

...



'

'가 ...'

...



in

,

,



,



인천대 조동성 총장이 인천시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파워엘리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 시의회, 인천대총장 초청 의정역량 강화 특강

인천시의회는 6일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을 초청, 파워엘리트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라

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조 총장은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의 발전방안과 비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 방향에 대해 "인천대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

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대학으로, 그간 구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 의원 및 인천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증대와 인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진기자 khj@

# 인천시의회 소통·공감 확산

## 의정역량 강화 위한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파워엘리트 특강

인천시의회는 6일 의원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워엘리트 강연을 인천대학교 총장(조동성) 특강으로 의회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조동성(趙東成) 인천대학교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 관장 및 2016년 7월에는 인천대총장에 취임했다.

이날 시의회 특강에서는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방안과 비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강연했으며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방향에 대하여 “인천대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대학으로, 그 간 구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의원 및 인천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증대와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강연을 통하여 인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역량강화를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lbo.com

# 인천시의회 소통·공감 확산...의원 의정역량 강화

##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초청 파워엘리트 특강 실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지난 6일 의원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워엘리트 강연을 ‘인천대학교 총장(조동성) 특강’으로 의회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조동성 인천대학교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 관장 및 지난 7월에 인천대총장에 취임 했다.

이날 시의회 특강에서는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방안과 비전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쉽게 강연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방향에 대해 “인천대는 300만 인천시민

을 대표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 대학으로 그 간 구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의원 및 인천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증대와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강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역량강화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최장환 기자 cjh@naewoeilbo.com

# 인천시의회, '소통과 공감' 확산

## 의원 의정역량 강화, 인천대 총장 특강

인천시의회는 6일 의원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워엘리트 강연을 '인천대학교 총장(조동성) 특강'으로 의회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조동성(趙東成) 인천대학교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 관장 및 2016년 7월에는 인천대총장에 취임했다.

이날 시의회 특강에서는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 속의 인천대'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방안과 비전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쉽게 강연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방향에 대해 "인천대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대학으로, 그

간 구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의원 및 인천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증대와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강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역량강화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배기자

# 인천시의회, 인천대 조동성 총장 '파워엘리트' 특강

인천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워엘리트 강연을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특강'으로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사진)은 시의회 특강에서 '세계 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 주제로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방안과 비전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강연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방향에 대해 "인천대는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대학으로, 그간 구



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 의원 및 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강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경인종합일보

2016년 09월 07일 수요일 015면 오피니언

#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파워엘리트 특강 성료



##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

인천광역시의회는 6일 의원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워엘리트 강연을 '인천대학교 총장(조동성) 특강'으로 의회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조동성(趙東成) 인천대학교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 관장 과 지난 7월 인천대총장에 취임 했다.

이날 시의회 특강에서는 '세계속의 한국과 중국' '한국 속의 인천' '인천속의 인천대'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와 인천의 역할 및 인천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학 발전방안과 비

전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쉽게 강연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발전방향에 대해 "인천대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기반의 글로벌대학으로, 그 간 구축한 미래가치와 비전을 시의회의원 및 인천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역할 증대와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강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역량강화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남 기자/jonghapnews.com

# ‘엉터리 설문조사 인데도...’ 중장기보육계획 고수 논란

여성재단, 조사방식 문제 지적에  
재조사했지만 1차 결과 비슷 이유  
첫 조사결과로 계획 수립 나서

인천시가 엉터리 방식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해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시는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중부  
일보 5월 30일자 1면 보도)을 알고 있음  
에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잘못된 방  
침을 고수하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인천여성가  
족재단을 통해 ‘2017~2021년 중장기 보  
육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범위는 보육실태조사를 통한 인  
천시 보육여건의 진단과 전망, 어린이  
집 종사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여성가족재단의 설문조사 방  
식에 문제가 있어 신뢰도 하락 등의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단은 실태조사를 위해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787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설비 수  
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어  
린이집에 대한 불만 사항을 표기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설문조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설문지  
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학부모가 작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성된 설문지  
는 밀봉되지도 않은 채 어린이를 통해  
다시 원장에게 전달, 어린이집 원장이



▲중부일보 5월 30일자 1면 보도

손쉽게 볼 수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의식해 어린이집 만족  
도가 높다고 항목을 체크할 수밖에 없  
다. 특히 설문지에는 부모의 최종학력과  
직업, 월 평균 소득, 거주지 등 보육정책  
과 무관한 내용도 다수 담겨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어린  
이집 학부모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다시 진행했지만 중장기 계획 수  
립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기존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엉터리 설문조사를 진행한 여성가족  
재단은 올해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  
으로 공문을 보내 연구용역 의뢰를 부  
탁했지만 연구용역을 받은 건수는 ‘0’건  
이다. 또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도 지난  
달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지만 오는 10  
월까지도 연기한 상태다.

이강호 시의원은 “이런식의 설문조  
사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악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설문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용역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해  
명했다. 조기정기자

# 인천 경제수장 인사 ‘만사불통’... 능력 검증 덜 되니 문제

## 고위직 잇단 임기 내 자리 옮겨... 지역발전 헌신할 ‘사람’ 찾자

‘인천시민들은 지지리도 인복(人福)이 없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 시중에 나온다. ‘왜 시민들은 이 같은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원인은 간단하다. 인천을 우습게 여기는 ‘중앙’ 출신 고위공직자와 기관·단체장들의 처신이 빌미가 됐다.

<관련 기사 3면>

7일 현대상선으로 복귀하는 유창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의 최근 행보가 그러했고, 민선6기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된 경제부시장을 거쳐 간 2명의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쫓아 인천을 떠났다.

백규환 초대 경제부시장은 11개월 만에 퇴임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어바통을 넘겨받은 홍순만 부시장도 8개월 만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에게는 인천이 단지 자신들의 ‘스펙 쌓기’ 용에 불과했으며, 시민들은 인종에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무책임’과 ‘무능력’에 빠져 인천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중앙 고위공직자 출신 인천경제청장도 존재감 없이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항만은 수장을 잃고 표류 중이고,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채 동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다.

시민들은 원칙을 무시한 잘못된 ‘인사’를 꼬집는다. 지금이라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은 “경제 분야 전문기자기보다 출세 지향적인 관료를 영입하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경제 분야 공공기관 수장으로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만을 위해 자

경제부시장에 이어 IPA 사장까지

‘인천 거처 입신양명’ 공식화 될라

시민들 ‘인복 없다’ 상실감만 커져

관료 발탁 전 비전 제대로 따져볼

청문회 도입 등 시스템 정비 필수

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험난했다. 이어 그는 “학연과 지연에 치우쳐 시장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영입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원로인 한 인사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 문제다”라며 “이들이 재임기간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민에게 큰 상실감만 안겨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말한 원로는 “지난 1년간 새로 부임한 인천경제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한번이 면전에서 거절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 기자 us216@khihoibo.co.kr

## 경인일보

2016년 09월 07일 수요일 006면 경제

# 중소도 모르는 인천TP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현장 홍보부터 챙겨라”

“통합하면 뭐하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박윤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 원장이 통합 후 처음 참석한 ‘제23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체면을 구겼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등에 분산해 있는 인천TP는 지난 7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분야 공공기관 3곳이 통합해 출범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등이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통합의 취지인데, 정작 인천TP의 존재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인천TP 출범을 알아도 통합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포문은 김금용(남구 제4선거구) 의원

경제분야 공공기관 3곳 통합후

첫 시의회 업무보고 체면 구겨

최대 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

“흠피내용없다” 여론 분발 촉구

이 열었다. 김 의원은 “통합기관(인천TP)을 아직 모르는 기업이 많다는 게 문제”라며 “충분히 홍보해야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3개 기관이 왜 통합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한다. 하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별 내용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 후 제작한 홍보물과 홍보영상 등을 제출하라며 “가장 기본인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부터

챙기라”고 주문했다.

박병만(비례) 의원은 “통합의 최대 목적이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윤배 인천TP 원장은 “3개 기관이 통합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 역량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홍보(기능)는 ‘비즈-OK’팀에 통합해 자체 시스템(인력 등)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완을 약속했다.

인천TP는 3분부·3실·3단·23개팀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 사업을 이끌 ‘전략정책연구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OK’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 SOS팀’ 등이 신설됐다. 그간 통합 추진과정에선 여론 수렴부족, 중앙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임송재기자 isj@kyeongin.com



# 계양 소극장 건립사업 무산 국·시비 32억7천만원 반납

## 3년간 국비 신청 불가능 민간투자방식도 불투명

인천 계양구가 '소극장 건립 사업'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32억7천만 원을 올 초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위치가 모텔 밀집지역이고 소극장이 지하에 건립된다는 이유로 계양구의회가 사업을 반대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6일 조계자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14년 '계양구 소극장 건립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비 18억6천800만 원과 시비 14억200만 원 등 총 32억7천만 원을 지난 1월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하게 되면서 계양구는 앞으로 3년간 같은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구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사업 자체가 3년간 힘들어진 상황이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직전동 902번지 체육공

원에 소극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현 상황에서 구는 대안으로 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주차빌딩'에 소극장을 유치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간투자자가 주차빌딩에 소극장을 받아들여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병학 계양구의원은 "부지용도가 체육공원인 곳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보니 소극장이 지하에 들어서게 돼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해 반대했다"면서 "현재 부지를 문화공원 용도로 변경한 뒤 구 예산으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고 소극장도 번듯하게 지상에 만들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계양구는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쉽게 포기한 계양구와 구의회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소극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문화시설조차 없이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우기자

# 도시개발조례 ‘주민공람·공고’ 삭제 추진 논란

## 시의회 건교위, 개정조례안 반력

인천시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에 앞선 도시계획위 심의 및 주민 공람·공고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6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국이 상정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반려했다.

이한구 의원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도시개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과

이한구 의원 “자의적 해석해 삭제 별도 의견수렴창구 등 대안 필요”

市 “상위법 없는 조항이라 요청”

주민들 공람·공고에 대한 조항이 조례에 빠져 있다”며 “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핑계를 자의적으로 해석, 삭제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의 심의를 제한하게 되면 별도의 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시가 삭제하려해 논란이 된 시 ‘도시개발 조례’ 2조와 4조는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함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시는 상위법에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삭제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의원들은 시가 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 보완 없이 심의 기관인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발사업은 개발지역 주민과 조합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 같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상위법에 없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사업자와 주민들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

## 경인일보



‘동네방네’ 발품행정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과 관계자들이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인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신거북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54억 들인 학사행정시스템 ‘퇴물’로

## 인천글로벌캠퍼스 ‘오라클 시스템’ 유지비 부담 등 사용 중단...예산 낭비 지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학 학사행정시스템 사용을 중단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오라클 시스템’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오라클 시스템은 대학의 학사행정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대학의 구매나 회계와 같은 일반행정과 교수들의 연구 자료를 보관하는 연구행정을 총괄한다. 미국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사인 ‘오라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2010년 글로벌캠퍼스쪽에 오라클 시스템 설치를 요구했다. 미국 본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4억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설립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2012년부터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오라클사를 상대로 사용 기간을 갱

신했다.

갱신료는 매년 최고 1억3000만 원 소요됐으며 재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사용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오라클 시스템 사용자가 많지 않아 한계가 발생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쓰기가 까다롭고 기술에 능한 국내 전문가가 필요했다. 매년 들어가는 갱신료도 만만치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뉴욕주립대는 올해부터 오라클 시스템 사용을

포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유제홍(부평구2) 의원은 “사용하지도 못할 것에 54억원을 들이다니 막대한 예산 낭비”라며 “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방정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대표이사는 “외국 대학의 특수성과 미국 본교와의 업무를 위해 설치했지만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장지혜 기자 jih@incheonilbo.com

# “둘 곳 없다”... 버려지는 도서관 책들

‘책’이 ‘폐지’로 전락했다. 둘 곳이 없어 매년 폐서되는 책이 어마어마하다. 인천 도서관들이 매년 수 십억 원을 들여 새 책을 구입하면, 그만큼의 책들이 쓰레기가 된다.

최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안타까운 대화가 오갔다.

인천시의회 A의원의 “어려운 점이 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라는 현실적 질문에, B도서관장은 “보존서고 문제입니다.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조기 건립이 시급합니다”라고 답했다.

인천의 각 도서관 사서들은 매년 한숨이 나온다. 속상하다.

누구에게는 꿈을 심어줬고, 미래를 열어 준 도서관 장서들의 운명이 가없다.

매년 새로운 장서들을 보면 흐뭇하지만, 그만큼 서가에서 책들이 빠져나가야 한다.

책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6일 인천지역 도서관들에 따르면 도서관 내 책들로 포화 직전이다. 그렇

### 매년 수십억 새책 구입...들어온 만큼 폐기 미추홀도서관 보존업무 수행 제역할 못해 “보존서고 문제...별도시설 건립 시급” 요구

다고 책이 넘쳐나는 도서관 현실은 좋지만은 않다.

인천에는 54개 도서관이 있다. 인천시가 관장하는 도서관과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군·구 도서관 등으로 이뤄졌다. 장서는 5월 말 현재 418만3500여권이다.

1년에 도서구입비는 약 28억 원. 매년 도서관 장서는 늘고 있지만, 이를 보관할 도서관 서고는 한정돼 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도서관법에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인천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미추홀도서관이 보존서고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책의 폐기다.

지역 도서관들은 소장 도서 중 같은 책을 ‘복본(複本)’이라며 폐기한다. 미추홀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각종 문화자원의 보고가 되어 함에도 현재는 ‘읽을 거리’로만 책들이 쌓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서고로 보낼 책을 분류 중”이라며 “아직 보존서고는 없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폐서를 분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보존서



불용대상 도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고 필요성이 담긴 정책과제를 만들어 관련 예산 사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약은 없다.

시는 “시의 열악한 재정 문제로 보존서고가 후순위로 밀렸다”며 “정책과제로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바로 예산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 경기일보

2016년 09월 07일 수요일  
017면 사람들

## 인천 부광노인대학 2학기 개강

인천시 부평구 부광노인대학은 6일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는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박민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신은호 인천시의원, 최용복 부평구의회 부의장, 윤순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재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재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품물, 한글, 컴퓨터, 원예, 무용 등 4개 학부 35개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예술축제와 11월 부광공연예술교류단 등에 참가하며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 김덕현기자

# 기호일보

2016년 09월 07일 수요일 007면 경제

## 출범 3개월 IBITP, 홈페이지조차 없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전국 광역단체 중 첫 경제 공공기관 통합 법인  
홍보 부족... 중기 '원스톱 서비스' 시너지 글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구축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직은 성급할 수 있지만 경제기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통합 이후 IBITP가 지역기

업과 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 안내 및 설명회 등 관련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통합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29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행정자치부 통합 지침에 부응해 지역 경제 분야 공공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신설 통합법인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를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통합 이후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업무설명회나 홍보 활동도 진행되지 않는 데다, 통합 전 각 기관의 업무 공간과 인력도 남구·남동구·연수구 등에 50% 이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금용 의원은 "IBITP로의 통

합 이후 추가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고 어떤 시너지가 있었느냐"며 "아직까지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IBITP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병만 의원도 "통합의 최대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인데, 사실상 그게 나아진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이라며 "인위적 통합이 그런 근본

적 취지와 맞지 않고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윤배 IBITP 원장은 "공모를 통한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 중에 있고, 홍보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들을 대하면서 3배 늘어난 역량만큼 신규 과제 수주와 국비 확보 등 통합법인에 걸맞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 “동료 의원간 주먹질 인천시의원 징계하고 워크숍 비용 조사해야”

## 더민주 인천시당 촉구 시민단체는 검찰 고발

〈속보〉인천시의회 동료 의원 간 폭행 사건(본지 9월5일자 1면보도)과 관련하여 지역 내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조사 및 윤리위 회부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건설교통위원회 워크숍에서의 동료 의원 간 폭행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갈원형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한 후 윤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해 소통과 윤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개인의 단순 폭력이 아닌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직무유기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시의회는 즉시 윤리위를 열어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국민혈세가 워크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 활빈단도 성명서를 통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은 사과문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8일 시의회 본관서 시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해당 의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시의원 7명과 사무처 직원 6명 등 13명이 충북 제천 업무연찬회 길에 올랐다.

버스승차 즉시 양주파티를 벌이

던 중 A의원(62)과 B의원(59)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휴게소에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져 결국 B의원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태는 A의원이 안경을 쓴 B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폭행이라고 밝혔으나, A의원은 화장실에 가는 B의원을 부축했는데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에서 오 의원이 발을 헛디뎈 구덩이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눈 근처가 찢어져 4바늘을 꿰매고 눈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B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 경기일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업무 연찬회에서 술판 싸움(본보 4, 5일자 7면)을 벌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업무중 낮술에 만취해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의장단도

## 만취 싸움추태 시의원 자진사퇴 목소리 확산

제7대 인천시의회 무능과 미숙, 물염치와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연대는 “큰 문제는 음주가 뒷 풀이 자리에서 벌인 것이 아니라 업무 전인 일과 중에 이뤄졌다는 것이다”며 “인천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의원들이 대낮부터 양주와 고량주로 술파티를 벌이고 만취해서 저자거리의 폭력배들처럼 공공장소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민교기자

## 주민소환 투표에 부처져야 할 인천시의원들

선출직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을 말한다. 선거로 뽑힌 이가 현명하고 예의바르면 그런 사람을 뽑은 유권자는 현명하고 예의를 아는 이들이다. 반대로 선출직이 '무뢰한' 이면 그런 이를 뽑은 유권자도 같은 부류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인천시민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잘 나가던 어물전을 몇몇 꼴뚜기가 망신시킨 탓이다. '인구 300만! 대한민국 3대 도시!' 라고 아무리 외친들 바탕을 이루는 문화와 의식 수준이 바닥을 헤매면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구호일 뿐이다.

인천시민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버스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워크숍 길에 올랐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되고 운행되는 버스 안에서 시의원들이 육회를 안주 삼아 양주와 고량주를 마셨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한 명이 나이가 서너 살 많은 같은 당 시의원에게 "야, 야"하며 반말을 하다 다툼이 벌어졌다. 이윽고 버스가 박달재 자연휴양림 근처 한 휴게소에 잠시 멈췄다. 휴게소에서 또 술자리가 이

어졌다. 앞서 버스 안에서 다툼을 벌였던 두 시의원이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들은 곧 몸싸움을 벌였고, 1m 깊이의 웅덩이에 함께 떨어져 나뒹굴었다. 이중 한 시의원이 얼굴을 크게 다쳐 근처 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현재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게 어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시정잡배도 이러진 않는다. 몸싸움의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 보면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다. 욕하고, 주먹 휘두르고, 구덩이에 함께 떨어져 나뒹구는 인천광역시의회 대표들이라니. 한 시민단체가 "돼먹지 못한 완장 찬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만취 상태로 폭력이나 구사하며 지방의원 망신을 다 시킨 꼴뚜기 짓"이라며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 주민소환제를 발동시켜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 시민들의 힘이, 유권자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인천시민이 '무뢰한'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 시 인권보호, 증진 조례안 철회 기자회견



인천시 기독교 총 연합회(이하 인기총)와 인천 동성애 대책 위원회는 지난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조차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인권위법을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유신 목사(인기총 동성애 대책위원장)는 "지난 1월 11일 이 용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법 제2조 3항에

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청년의 경우(만 13~24세)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4.9%가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 과학연구협회 역시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

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4배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8배나 증가했으며 2013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전락 했다.

김길수 목사(인기총 대책위 사무총장)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잘못된 조례를 막을 수 있다"며 "성적 지향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유신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반대행위는 차별로 보아 규제하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 기독교 총 연합회 산하 10개 구·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인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발족 했다.

인기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적대시 되는 동성애와 관련 인천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가 안될시 인천시 민연대와 함께 전국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기총 진유신대책위원장, 김길수 대책위 사무총장, 이웅세 목사, 김영분 회계, 전용택 장로, 서성원 장로(해병대 단장), 허인에(우리기업 대표) 해병대원 10여명이 함께 했다.

김종진 기자/jonghapnews.com

# 인기총, 인권보호 증진 조례안 철회 촉구

##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



인천시 기독교 총 연합회(이하 인기총)와 인천 동성애 대책 위원회는 지난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조차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국가인권위법을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유신 목사(인기총 동성애 대책위원장)는 "지난 1월 11일 이용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조장하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청년의 경우(만 13~24세)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4.9%가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밝혔다.

또 성 과학연구협회 역시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4배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수는 8배나 증가했으며 2013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전락했다.

김길수 목사(인기총 대책위 사무총장)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잘못된 조례를 막을 수 있다"

며 "성적 지향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유신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반대행위는 차별로 보아 규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인천 기독교 총 연합회 산하 10개 구·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인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기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적대시 되는 동성애와 관련 인천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가 안될시 인천시 민연대와 함께 전국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기총 진유신대책위원장, 김길수 대책위 사무총장 이용세 목사, 김영분 회계, 전용택 장로, 서성원 장로(해병대 단장) 허인애(우리기업 대표) 해병대원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진희 기자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인천시 기독교총聯 기자회견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와 인천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조차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유신(인기총 동성애 대책위원장) 목사는 "지난 1월11일 이용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

###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 촉구

년·청년의 경우(만13~24세)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4.9%가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밝혔다.

또 성 과학연구협회 역시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에이즈 감염자수는 4배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수는 8배나 증가했으며 2013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1만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전락했다.

김길수(인기총 대책위 사무총장) 목사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잘못된 조례를 막을 수 있다"며 "성적 지향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한편, 진유신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반대행위는 차별로 보아 규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인천 기독교총연합회 산하 10개 구·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인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기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적대시되는 동성애와 관련, 인천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가 안될 시 인천시민연대와 함께 전국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기총 진유신 대책위원장, 김길수 대책위 사무총장, 이용세 목사, 김영분 회계, 전용택 장로, 서성원 장로(해병대 단장), 허인애(우리기업 대표) 해병대원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원영기자

# 공무원 외부활동 ‘38건 규정위반’

## 상반기 288건 신고…시 “김영란법 맞춰 사례금 상한액 높일 계획”

인천시 공무원들이 올 상반기에만 28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8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8건은 사전신고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는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다며 상한액을 올리려고 한다.

6일 시의 ‘외부 강의·회의 등 운영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신고된 소속 공무원의 외부 활동은 288건이었다.

강의·강연이 220건(69%)으로 가장 많았고 발표·토론·회의 16건, 심사·평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이 외부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7966만 원이었다. 4·5급 공무원의 비중이 높았다. 4급 공무원은 18건 1707만 원, 5급 공무원은 38건 1739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3급 공무원은 외부 활동이 9건뿐이었지만 금액은 568만 원이었다.

외부 활동 가운데 13.2%에 이르는 38건은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외부 활동이 13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건이었다. 아예 신고 절차를 무시한 외부 활동도 12건이었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외부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시는 사례금 상한액을 높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다.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외부강의 대가를 ‘4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으로 정해놓았다. 모두 1시간 기준이다. 김영란법은 상한액이 4급 이상 30만 원, 5

급 이하 20만 원으로 돼 있다. 다만 김영란법은 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 상태로 유지하면 되는 데도 공무원들이 7만~8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시 내년 국비 2조3847억 확보

**올해보다 267억 줄어들어  
문자박물관 등 추진 타격  
국회 심의때 추가확보 올인**

인천시가 올해보다 267억 원이 줄어든 2017년도 국비 2조3천847억 원(정부 예산안)을 확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2조3천847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 2조4천114억 원에 비해 267억 원이 줄어들었다.

시는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올해 수준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는 2조4천114억 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406억 원이 늘어난 2조4천52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15년에는 정부 예산(안)보다 774억 원이, 2014년에는 1천41억 원이 각각 국회에서 증액됐기에 내년도 국비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원, 상임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도 시철도 2호선 280억 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156억 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66억 원,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52억

원,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16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8억 원, 인화~강화(국도 48호선) 도로 건설 268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가 요구했던 인천발 KTX 사업 비용 200억 원은 37억 원으로 감액됐다. 여기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비용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20일 이후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비 증액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시는 인천발 KTX 사업을 비롯해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백령~인천 항로

운항 재개 지원, 서해5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 인천시 소통담당관, 시민이 맡는다

## 개방형 채용 19일부터 모집

## 사회단체 등과 스킨십 강화

인천시가 대(對) 시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채용한다. 인천시는 6일 '인천시 개방형 직위(시민소통담당관) 모집' 공고를 냈다.

민관협력 정책소통 강화, 소통 활성화과제 발굴·시행,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민관 공동 소통 아카데미 운영, 갈등민원 예방·해

결 등이 시민소통담당관의 주된 업무다.

인천시가 시민소통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맡아왔다.

인천시관계자는 "사회단체·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원소통담당관실을 만들었고, 같은 해 7월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지금의 시민소통담당관실

로 확대 개편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이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말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협상 능력 등이 주요 심사 요건이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

( = ) = 가

6

가

7

?

" 가 300 "

"

가

"

[ = ] ( , ) 6 ( ) ' 3 .

(趙東成)

가

2016 7

" 300  
가

가 " .

300 9 6 . ' 6 .  
 가 , 가 , 2

6 . 24 ' ' ' .  
 " 4 , 가 가 10 "  
 " 가 가 가 "

'가 ...'

?

[ , ]

( 6.8 )

2 234

2

' 6.8

2

4 , 5 , 4

9

2

가 5900

715m<sup>2</sup>) 6 , R1 ( 1 4 4176m<sup>2</sup>) 1 A1 ( 18

6335

A1, R1)

30

' 6.8

(

6

가

가

가

가

" 6335

9 5

가

가 34%

41%

가



가

가

가

2012

)

3  
5900

(  
A1, R1

가  
9

8

1

YMCA, "  
" (jalbin@hanmail.net)  
16-09-06 17:53 |

6

300

2

가

가

YMCA

"300

가

" 가

가

"

.

YMCA "

"

"

"

.

가

5 가 6·8 30

가 (5900 )

가 2

6·8

R1 '1

6 2

68 22 3

10 가

34% 41%

가 가

가 가

7 2

가 6

" " 1.4m "

," " "

ywkim@hani.co.kr